

현장과 시각

‘영산강 뱃길’ 머리 맞대라



홍행기
정정부 차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지사의 이날 회견은 갑작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특히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하 해할 지름?’이라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 온 박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조금은 뜻밖인” 이유를 내놨다. 박 지사는 답변 첫머리에 “경기 침체와 북한 문제 등”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데, 논란거리 하나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의 반대를 의식해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을 미루기보다는, 지역민을 설득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정공법’(正攻法)을 택한 것이다.

박 지사는 이날 회견 내내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물류가 아닌 수질개선과 치수대책에 주력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영산강 뱃길복원과 한반도 대운하를 차별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영산강이 식수로만 돌본 농업용수로 쓸 수 없을 만큼 오염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금 영산강 뱃길 복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는 곧바로 ‘한반도 대운하와 차이가 없다’며 ‘영산강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영산강 운하-영산강 뱃길복원 백지화 투쟁에 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남도의 뱃길복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남도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한반도 대운하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영산강의 오염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명렁이, 지역의 중요 사업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전남도와 일부 환경단체가 영산강 뱃길복원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을 위한다’는 출발점은 똑같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지난간 시대의 망령일 뿐이다. /redplane@kwangju.co.kr

일자민 새 총재 아소 다로 선출

24일 총리 지명 새내각 발족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22일 오후 당 본부에서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아소 다로(68)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아소 신임 총재는 오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의례적인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후임자로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아소 총재는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정조회장, 고이케 유리코 전 방위상,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과 결합한 선거에서 예상대로 1차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총재선거 투표권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386명과 지방대표 141명 등 총 527명으로, 아소 총재는 전체의 67%인 351표를 얻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대표에 맞서 차기 중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할 ‘당의 얼굴’을 뽑는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아소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표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소 총재는 취임 후 곧바로 주요 당직 인선에 착수,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대리를 간사장으로 기용하는 한편 정조회장과 총무회장, 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차기 중의원 선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총재는 23일에는 공명당의 오타 야카히로 대표와 여당 대표 회담을 갖고 연합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예정했다.



22일 일본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아소 다로 간사장이 자민당 총재 집무실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국은 민주당이 하루 앞선 21일 오자와 대표의 3선을 결정함에 이어 자민당도 새 지도부를 구성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 모두 총선거 체제로 공식 전환하면서 차기 정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자민당은 임시국회에서 각 당 대표집단 등의 기본적인 일정을 서

둘러 마친 뒤 다음달 중 중의원을 해산, 조기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선 시기는 임시국회에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종합경제대책과 관련한 금년도 연립정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예정했다.

보수 우익 대표주자... 국수주의 심화 전망

日 아소 다로 총리 체제, 한·일관계 개선 불투명

정부가 국수주의를 22일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아소 다로(麻生太郎)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함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 및 북핵 협상 등 현안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기민하게 대처했다.

이와 함께 아소 총재가 오는 24일 소집되는 임시의회에서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후임자로 새 내각을 발족시키더라도 조만간 있을 총선에서의 결과에 따라 다시 일본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의상을 역임한 아소 신임 총재가 총리로 등극하게 될 경우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

는 한일 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태생적으로 보수 우익 성향이 강한 만큼 ‘아소 체제’ 출범으로 오히려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입지가 강화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소 신임 총재는 이미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찬양하는 가 하면 일왕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주장하는 등 한일관계를 해치는 각종 발언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한 소식통은 “외교 현안에 정통한 만큼 6자회담 등 북핵 현안과 동북아 역학 변화 등에 민감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다만 그의 우익 성향으로 한일 관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명한 외교장관은 19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일본의 새 총리 선출 이후 새로 구성될 내각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현안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조만간 일본의 새 내각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일 간 서해선교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자들은 아소 체제 출범 이후 일본 정국이 차기 정권을 둘러싼 치열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천주교사제단 신부 96명 방북

금강산 피격 이후 민간단체 잇단 방북길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통일부의 규제도 없어졌던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길이 최근 해빙을 맞았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 136명이 지난 20일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96명이 북한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방북했다. 전종훈 신부를 비롯한 신부 방북단은 22일 평양 장충체육관에서 이성당 설립 20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원미사’를 갖고 26일까지 평양과 백두산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천주교측의 방북은 2002년 10월 이후 6년만에 처음이며 천주교측이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사제단의 고려항공편 방북은 금강

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직후인 7월 15~18일 대한에장 통합총회 남산교회전국연합회 목회자 등 157명이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를 방북할 당시 고려항공을 이용한 후 처음이다.

사제단에 이어 23일에는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지역본부 방북단 51명이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했다. 방승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본부 상임대표를 포함한 6·15남측유 관계자들이 27일까지 평양과 묘향산, 백두산 등지를 돌아보고 6·15북측위와 남북 지역간 교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지난 5일 5년만에 처음으로 천주교측이 남북 교류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사제단의 고려항공편 방북은 금강

“美비자 면제 예정대로 내년초 시행”

외교통상부 “범죄정보 교환 막바지 협의 진행”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현재 여항자 범죄정보 교환에 대해 막바지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예정대로 연말에 가입이 확정되고 내년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 지역권 발급과 전자여행 허가제, 출국 통제시스템 구축 등 VWP 가입을 위한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져 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행자 범죄정보 교환’과 관련한 협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범죄항목을 정하는 게 정점”이라며 “한·미 양국의 행정제도가 다르고 사회적

정서에도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니 그런 데서 오는 차이를 좁히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여행자 중의 심이 가는 자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각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면서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국무부가 한국을 제외한 체코 등 나머지 7개국과 먼저 협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中 멜라민 유제품 피해 아동 5만3천명

중국에서 공업용 화학원료 멜라민이 섞여 들어간 유제품의 피해 아동들이 총 5만 3천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위생부는 21일 저녁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1만2천892명이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이어 104명은 중태라고 밝혔고 관련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입원 어린이 가운데 80% 이상은 2세 이하의 유아다. 그의 3만9천965명은 통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라고 위생부는 말했다. /연합뉴스

20일까지만 해도 6천200명 수준이던 피해 아동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가 지적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섞인 저질 유제품으로 인해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생부는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 대부분이 산투(三鹿)사의 분유 제품을 먹은 뒤 병원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액체 상태의 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경매의 자유실! 법원경매 대증법률(주) T.062)225-0099 010-9525-2335

경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철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